

공식 제목 및 개요

작성자: 검찰총장

- 개인이 탄약을 구입하려면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용량 탄창의 소유를 금지하고 그것을 지정된 대로 처분하도록 요구함.
- 허가 받은 탄약 공급 업체를 통해 대부분의 탄약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법무부에 보고되어야 함.
- 분실 또는 도난된 총기 및 탄약은 법 집행 기관에 보고되어야 함.
- 총기 절도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함.
- 총기 소지 금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수립함.
- 법무부가 연방 범죄 경력 즉시 확인 시스템(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에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주 및 지방 정부 재정에 미치는 최종적 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산 요약:

-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서 총기를 압수하기 위한 새로운 법정 절차와 관련하여 연간 수천만 달러의 주 및 지방 정부의 법 집행 비용의 증가가 예상됨.
- 탄약 판매 규제와 관련한 주 정부 비용이 연간 수백만 달러를 초과하지는 않는 범위에서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비용은 수수료 수익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
- 총기 및 탄약 관련 처벌의 변경과 관련된 주 및 지방 정부의 교정 비용이 연간 낮은 수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입법 분석관에 의한 분석

배경

총기 및 탄약 소지에 관한 제한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특정 개인은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 "금지 대상자"에는 (1) 성폭행이나 구타 등 중범죄 및 일부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 (2)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자, 및 (3) 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포함된다. California에서는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은 자는 탄약 소지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총기 판매 규정

연방법 및 주법 모두에 총기상 면허를 포함하여 총기 판매 관련 다양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신원 조사** 연방법에 따라, 총기상은 국가범죄신원조회시스템(NICS)에 총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NICS는 수많은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구입자가 금지 대상자가 아닌지 확인한다. California는 연방법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NICS 및 다양한 주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이용하여 주 내의 총기상으로부터 요청된 모든 신원 조회를 진행한다.

- **금지 대상자로부터 총기 박탈** California 법무부(DOJ)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하거나 주에 등록된 개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DOJ 요원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더 이상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총기를 박탈한다.
- **기타 규정** 총기 관련 기타 주 규정에는 구입 가능한 총기 유형에 관한 제한, 총기상이 구입자에게 총기를 건네기 전 십 일 대기 기간, 및 총기 판매 기록 및 보고에 대한 요건이 포함된다.

총기상 및 구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주의 총기 판매 규제 비용과 상쇄된다.

입법 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탄약 판매 규정

올해 이전에는 주에서 총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탄약 판매를 규제하지 않았었다. 2016년 7월, 주에서는 탄약 판매 규정을 늘리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다. 해당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탄약 판매 면허** 2018년 1월부터, 탄약을 판매하려는 개인 및 업체는 DOJ로부터 일 년 면허를 획득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사냥 여행 중인 다른 면허를 받은 사냥꾼에게 개월당 탄약 50발 미만을 판매하는 면허를 받은 사냥꾼 등, 일정 개인 및 업체의 경우, 면허를 획득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탄약상은 면허를 획득하려면 금지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주/연방 정부 모두에서 면허를 받은 총기상 및 총기 도매업자 등, 일정 주체에게는 탄약 면허가 자동으로 주어질 수 있게 된다. 총기 판매 요건을 세 번 준수하지 못한 판매자는 탄약상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된다. DOJ는 행정 관리 및 법 집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탄약 판매 면허를 받으려는 개인 및 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탄약 구입에 대한 DOJ 승인** 2019년 7월부터, 탄약상은 구입 시점에 탄약 구입자가 금지 대상자가 아님을 DOJ에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이 요건은 은폐된 무기를 지니도록 허가된 자 등, 일부 개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탄약상은 일반적으로 이 년 동안 데이터베이스 보관을 위해 판매일, 구입자의 신원 정보 및 구입한 탄약 종류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DOJ에 보고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경범죄(벌금 및/또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으로 처벌 가능)를 구성한다. DOJ는 일반적으로 행정 관리 및 법 집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탄약을 구입하려는 개인에게 거래당 1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DOJ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매년 이러한 수수료의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
- **기타 규정** 2018년 1월부터, 주법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탄약 판매(인터넷 및 주

외 판매 등 포함)가 면허를 받은 탄약상을 통해 발생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대부분의 California 주민들은 면허를 받은 탄약상에게 먼저 전달되게 하지 않고는 주에 탄약을 들여오는 금지될 것이다. 이들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경범죄를 구성한다.

최근 입법 상태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주에서는 최근 탄약 판매 규정을 늘리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다. 주는 최근 법률을 입법하여 대용량 탄창의 소유를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법 집행 기관에 분실 또는 도난된 총기 신고서 접수를 위해 벌금을 만들었다. 이들 법률은 유권자 앞에 주민 투표로서 부쳐지지 않는 한 유효하다. 해당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는 이들 법률이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안

제안 63은 (1) 탄약 판매에 대한 주 규정을 변경하고, (2) 중범죄나 일정 경범죄 신고를 받은 후 금지 대상자로부터 총기를 박탈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정 프로세스를 만들고, 및 (3) 다양한 기타 규정을 이행한다. 또한, 법안 63은 변경사항이 법안과 그 "취지에 일관적인" 경우 해당 의회는 그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의회의 각 하원 의원의 55 퍼센트가 변경사항을 통과시키고 법안이 법률로 제정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 변경을 할 수 있다.

탄약 판매에 관한 주 규정 변경

제안 63에는 탄약 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이 포함된다. 일부 규정은 기존 법률을 유사 조항으로 대체한다. 단, 법안 63에 의해 제안된 기타 규정은 아래에 설명한 바와 같이 상이하다.

탄약 구입을 위한 요건 제안 63에는 탄약을 구입하려는 개인 및 해당 구입을 규제하려는 DOJ에 대한 다양한 요건이 포함된다. 특히 이러한 법안은

- 개인이 탄약 구입을 위해 DOJ로부터 사 년 허가를 획득하고, 탄약상은 탄약 구입하는 자들이 그러한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지 DOJ에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입법 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 금지 대상자인 개인으로부터 DOJ가 허가를 취소하도록 요구한다.
- DOJ가 탄약 판매 관련 다양한 행정 및 법 집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4년 허가를 신청할 때 최대 50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주는 유권자가 제안 63을 승인하는 경우 상기 조항을 대체 조항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2016년 7월 입안했다. (이 법률은 상기 언급한 제안의 "취지에 일관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제안 63 조항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이 법률에 의거하여 (1)탄약상은 탄약을 구입하려는 개인이 구입 시점에 금지 대상자가 아닌지 DOJ에 확인하도록 요구되며 (2) DOJ는 일반적으로 거래당 최대 1 달러의 수수료를 해당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들 조항은 현행법과 유사하다. 단, 현행법 하에서보다 이러한 확인 면제를 받는 개인 수는 더욱 적어진다. 예를 들어, 은폐 무기를 지니도록 허가된 개인은 이러한 확인 대상이다.

약탄약 판매 면허 제안 63은 현행법과 유사하게, 탄약을 판매하기 위해 DOJ로부터 일 년 면허를 획득할 것을 요구한다. 단, 본 법안은 면허 획득이 면제되는 개인 및 업체 유형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 본 법안은 일반적으로 적은 수의 탄약을 판매하는 개인 및 업체를 면허 취득 요건에서 면제한다. 이 법안은 탄약 판매 요건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 벌금에 다양한 변경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판매업체 면허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신규 형법 벌금-구체적으로 경범죄-를 구성한다.

기타 탄약 요건 본 법안은 현행법보다 1년 6개월 빠른 2018년 1월부터 면허를 받은 탄약상에게 먼저 탄약을 전달하지 않고는 California 주민이 주 안으로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첫 번째 발생에 대해 경범죄에서 법률 위반(벌금으로 처벌 가능)으로 변경되며 추가적인 발생에 대해 법률 위반 또는 경범죄 적용을 받는다. 본 법안은 DOJ가 2년보다는 영구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내 일정 탄약 판매 정보를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총기 박탈을 위한 새로운 법원 프로세스 창설

본 법안은 총기 소유가 금지된 범죄자 신고를 받은 개인이 계속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원 프로세스를 창설한다. 2018년 부터, 본 법안은 법원이 유죄 신고를 받은 범죄자에게 (1) 지방 법 집행 기관에 총기를 제출해야 하고, (2) 면허를 받은 총기상에게 총기를 판매하거나, (3) 총기를 보관 목적으로 면허를 받은 총기상에게 제공해야 함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한다. 본 법안은 범죄자가 자신의 총기에 대해 한 일을 보고하도록 법원이 보호 관찰관을 배정할 것 역시 요구한다. 범죄자가 여전히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법원이 알게 된 경우, 법원은 해당 총기를 박탈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정부 또는 주 소속 기관은 총기 박탈이나 보관과 관련된 조치 등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일정한 비용을 변제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타 조항 이행

변제 보고 본 법안에는 총기 및 탄약과 관련된 수많은 보고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본 법안은 탄약상이 탄약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48 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대부분의 개인들이 총기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지역 법 집행 기관에 5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 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은 최초 2 가지 위반에 대한 법률 위반 유죄가 된다. 추가적 위반사항은 경범죄를 구성한다. 또한, 본 법안은 지방 법 집행 기관에 허위 신고를 고의로 제출하는 개인에 대한 벌금을 경범죄에서 법률 위반으로 줄이며 해당 개인에 대해 십 년 동안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사항을 삭제한다. 또한, 본 법안은 DOJ가 신규 금지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신체 정보를 NICS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대용량 탄약창 2000년 이래, 주법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대용량 탄약창(탄약 10발을 초과하여 소지하는 자로 정의)을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이 법률은 2000년 전에 대용량 탄약창을 가지고 있었던 개인은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17년 7월부터, 최근 입법된 법률은

입법 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이러한 개인 대부분이 대용량 탄약창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준수하지 않는 개인은 법률 위반 유죄이다. 단,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되는 다양한 개인이 있다. 대용량 탄약창을 이용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총기(2000년 이전에 획득한)를 소유한 자 등이 이해 해당한다. 제안 63은 이러한 몇 가지 면제를 삭제함은 물론, 대용량 탄약창 소지를 위한 최대 벌금을 높인다. 구체저금로, 2017년 7월 이후 대용량 탄약창을 소지하는 개인이라면 법률 위반 또는 경범죄 유죄이다.

총기 도난에 대한 벌금 현행 주법에 따라, 950 달러 이하 가치의 총기 도난에 대한 벌금은 일반적으로 카운티 교도소 최대 일 년 수감에 의해 처벌 가능한 경범죄이다 본 법안에 따라; 해당 범죄는 중범죄가 되며 주 교도소 최대 삼 년 수감에 의해 처벌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총기 도난으로 이전에 경범죄 유죄 선고를 받은 개인은 십 년 동안 총기 소유가 금지된다. 현재, 총기 도난에 대한 경범죄 선고에 대한 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정상 영향

증가된 법원 및 법 집행 비용 유죄 선고 후 금지 대상자로부터 총기 박탈을 위한 새로운 법원 프로세스는 주/지방 정부에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주 법원 및 카운티 관찰 부서는 금지 대상자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및 제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주 및 지방 법률 집행 기관은 새로운 법원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총기를 제출하지 못한 범죄자로부터 총기를 박탈하는 데 관련된 새로운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총기 보관이나 반환과 관련된 비용 역시 증가할 수 있다. 총기의 박탈, 보관 또는 반환과 관련된 증가된 법 집행 비용 중 일부는 지방 정부 및 주 소속 기관이 이 법안에 따라 그러한

활동을 위해 부과 및 요금을 징구하는 정도까지 상쇄한다. 이러한 주/지방 비용의 전체 비중은 **연간 수 천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 실제 비용은 본 법안이 어떻게 이행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잠재적으로 증가된 주 규제 비용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탄약 판매 규정에 대한 본 법안의 변경으로 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법안 하에서는 더 많은 개인이나 업체가 주 탄약 요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한 실제적인 재정 효과는 이것이 어떻게 이행되고 개인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주 비용의 잠재적 증가는 연간 수 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비용은 기존 주 법 및 본 법안에 의한 다양한 요금과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

잠재적으로 순 증가된 상호 관련 비용 본 법안은 총기 및 탄약 관련 벌금에 다양한 변경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변경사항은 일정 범죄에 대한 벌금을 줄이는 한편, 다른 변경사항은 일정한 범죄에 대한 벌금을 늘린다. 순액으로 보면, 이들 변경사항의 결과, 교도소 및 감옥에 수감하는 비용 등 주/지방 정부에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의 비중은 위반사항의 숫자 및 본 법안이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따라 주로 달려 있다. 관련 비용의 잠재적 순 증가는 **연간 수 백만 달러를 초과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주로 이 법안을 지지 및 반대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리스트를 원하시면 <http://www.sos.ca.gov/measure-contributions>를 방문하십시오. 해당 위원회의 상위 10명의 기부자들에게 접속하려면 <http://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nov-16-gen-v2.html>을 방문하십시오.